

감독기구 이전, 정해진 것은 절차뿐이다

금융감독기구와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법 조문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2026년 7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이 확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2025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1.0%인 26,347천 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재지를 정한 법 조문이 없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법이 서울에 두도록 정해 두었다. 이 다섯 곳을 옮기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연구소는 이 논쟁에서 어느 쪽 주장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공개돼 있지 않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든 돈은 9조 1,549억 원이었다. 2차 이전의 비용 추정치는 공개된 것이 없다.

발행일

2026년 8월 30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분량

본문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 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특정 정책이나 정당에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도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금융감독기구와 정책금융기관이 서울 밖으로 옮겨 가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금 정해진 것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알아냈나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안에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섯 기관 가운데 다섯 곳은 법이 본점과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정해 두었다. 이 다섯 곳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옮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만 법 개정 없이 절차로 옮길 수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9조 1,549억 원이 들었고 105개 기관에서 47,908명이 옮겼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2년 38.3%로 목표 30%를 넘었고,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다. 이전 전후로 97개 기관의 퇴사율은 2.66%에서 3.11%로 올랐다. 이전 지역이 받은 지방세는 2조 5,072억 원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234,684명으로 목표 267,869명에 못 미쳤다. 2차 이전의 비용 추정치는 공개된 것이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금융민원과 상담은 지금도 인터넷과 전화, 서면으로 받는다. 서울본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사는 곳을 맡는 지원이 어디인지 금융감독원 국내지원 화면에서 확인한다. 이전이 진행되면 국토교통부의 승인 고시와 관보 고시에 기관 이름이 실린다. 보도가 아니라 그 두 곳을 본다.

한눈에

옮기는 절차가 둘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이고, 나머지 다섯 곳은

공공기관

이다. 따르는 법이 다르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이 사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갈라 적었다.
- 이해가 걸린 쪽이 낸 자료는 조사 주체와 대상, 표본을 함께 적었다. 표지와 요약, 장 앞 숫자 셋에는 그런 값을 쓰지 않았다.
- 견수와 사람 수는 서로 다른 것을 켜 값이다. 숫자마다 무엇을 센 값인지 적었다.
- 계산해 보인 값은 이 보고서가 직접 계산한 것이다.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1장	지금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4
2장	여섯 기관 가운데 다섯은 법을 고쳐야 한다	6
3장	왜 같은 논쟁이 되풀이되는가	8
4장	금융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11
5장	금융기관에 무엇이 달라지나	14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7
부록 가	용어 풀이	18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8

지금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보도로만 알려졌다.

51.0%

전국 인구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

2025년 · 국가데이터체 e-나라지표

26,347천명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수

2025년 · 국가데이터체 e-나라지표

0곳

정부가 2차 이전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한 기관

2026년 8월 기준 · 국토교통부 2026년
7월 15일 현재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항목에 이전계획을 하반기 안에 마련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고 적었다.¹

그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이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이다.²

수도권 집중을 줄이자는 요구가 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2025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1.0%인 26,347천 명으로, 두 사람 중 한 명꼴이다.³

보도로만 알려진 것

언론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전한다. 이 값은 정부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⁴

2026년 8월 1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 방향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했다. 같은 기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종 포함 여부와 이전 지역·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함께 적었다.⁵

발표 시기도 아직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치고 있어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예상한다고 말했다.⁶

절차가 들로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지금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다. 세종으로 옮기는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세우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한다.⁷

계획을 만든다는 방침은
정해졌고,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옮기도록 정해진
공공기관이다. 옮길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법이
정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옮길 기관이 스스로 지방이전계획을 세우고, 소관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해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옮겨 갈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에 알린다.⁷

두 절차 모두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먼저다. 그 계획이 아직 없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 전체를 다루지 않는다. 기관 임직원의 처지를 다루는 지면도 아니다.

질문은 하나다. 감독기구와 정책금융기관이 서울 밖으로 옮겨 가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표 1> 방침은 정해졌고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공식 발표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8월 28일 기준)

공식 발표로 확인한 것	공식 발표로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하반기 안에 2차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	이전 대상 기관의 이름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	기관별 이전 지역
대상 기관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부 설명	검토 대상 기관의 수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절차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주: 오른쪽 칸의 항목 가운데 대상 기관과 검토 규모는 언론 보도로만 알려져 있다.

자료: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국토교통부 해명자료(2026.7)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① 이전이 확정됐다는 말을 들으면 발표 주체가 어디인지 먼저 본다.

확인하는 곳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2 지금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본점 주소가 바뀌는지 따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해당 회사 누리집의 회사 소개 화면, 감독기구 이전과 금융회사 본점은 별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계좌나 보험 계약을 옮길 이유는 없다. 대상 기관도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다.

2장

여섯 기관 가운데 다섯은 법을 고쳐야 한다

조문이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만 적는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5곳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법이 정한 기관
2026년 8월 기준 · 각 기관 설립 근거법 조문

1곳

소재지를 정한 법 조문이 없는 기관
2026년 8월 기준 · 금융위원회

5가지

이전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법이 정한 항목
2026년 8월 기준 · 행정안전부합동시 건설 특별법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법에 적혀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각 설립법에 적혀 있다.⁸

금융위원회는 다르다. 소재지를 정한 법 조문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정부가 청사를 정한다. 지금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다.⁹

금융위원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옮길 수 있다. 나머지 다섯 곳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본점은 서울에 두라고 정해 두었지만,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더 두는 것은 이미 법이 열어 두었다.

주된 사무소

기관의 본부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회사의 본점에 해당한다.

본점을 옮기지 않고 사무소를 더 두는 길

다섯 곳 모두 같은 조문의 다음 항에서 필요한 곳에 자원과 출장소, 지점과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께 정해 두었다. 어디에 몇 곳을 둘지는 기관이 정관으로 정한다.⁸

논의는 흔히 옮기느냐 마느냐 둘로만 다뤄진다. 조문에는 셋째 경우가 이미 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있었다.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¹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6월 10일 같은 내용을 다시 냈다. 공동발의는 16명이다. 지금까지 통과됐다는 발표는 없다.¹⁰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소재지 조문을 고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계획에 담아야 하는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이전계획에 다섯 가지를 담도록 정해 두었다. 이전 대상 기관,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가 그 가운데 셋이다. 나머지 둘은 행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¹¹

<표 2> 다섯 곳은 국회를 거쳐야 하고 한 곳은 거치지 않는다

금융 관련 여섯 기관의 소재지 규정과 옮길 때 필요한 절차 (2026년 8월 28일 기준)

기관	근거 법률	법이 정한 내용	옮기려면
금융위원회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소재지를 정한 조문이 없다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 절차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주: 소재지를 정한 다섯 곳은 모두 같은 조문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지사·지점·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께 정해 두었다.⁸

자료: 각 기관 설립 근거법의 소재지 조문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특정 기관의 이전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기관의 근거법을 먼저 찾는다.

확인하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관 이름이 들어간 법률의 소재지 조문

- 2 법률 개정안의 처리 상태를 직접 본다.

확인하는 곳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법률 이름으로 검색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주소가 달라졌는지 찾아볼 이유는 없다.

3장

왜 같은 논쟁이 되풀이되는가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9조 1,549억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들어간 총 이전비용

2025년 12월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47,908명

1차 이전으로 자리를 옮긴 인원

2025년 12월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38.3%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30%)

2022년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이해는 네 갈래로 갈린다

지역이 한 갈래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부산은 공공금융기관과 선박·물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 금융단지로 지정됐다.¹²

지정 이후 17년째 금융기관 유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11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요구했다. 부산광역시는 그해 2월 유치를 바라는 기관 40곳을 국토교통부에 냈다. 두 가지 모두 유치를 바라는 쪽이 낸 요구다.¹³

기관과 임직원이 둘째 갈래다. 옮기면 사는 곳과 출퇴근이 함께 바뀐다.

옮겨야 하는 당사자가 옮길 계획을 만든다.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는 법 안에 들어 있다.

1차 이전비용 가운데 사람이 옮기는 데 든 돈은 7,758억 원으로 8.4%였다. 나머지는 청사와 부지에 들어갔다.

피감독 회사가 셋째 갈래다. 금융회사 본점이 서울에 몰려 있어 검사와 협의의 상대가 서울에 있다.

금융소비자가 넷째 갈래다. 민원과 상담을 어디서 받는지가 걸린다.

규칙이 이 구조를 만들었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지방이전계획을 옮길 기관의 장이 세우고 소관 행정기관이 검토해 조정하도록 정해 두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⁷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가 법 안에 들어 있다.

지역인재 채용은 법으로 의무를 지웠다. 그런데 감사원은 2026년 1월 감사 결과에서 그 의무가 걸리는 모집 범위 자체가 좁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산출한 2023년 실제 채용률은 17.7%였고, 국토교통부 발표치는 40.67%였다.¹⁴

1차 이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국회에산정책처는 2026년 4월 20년 사업의 결산을 냈다.

총 이전비용은 9조 1,54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청사 신축비가 7조 4,762억 원으로 81.7%다.¹⁵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05개이고 12개 지역으로 옮겼다. 2025년 12월 기준 47,908명이 이전을 마쳤다.¹⁶

총 이전비용을 옮긴 인원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9,100만 원이다.¹⁵

10개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34,684명이다. 중합발전계획의 목표는 267,869명이었다.¹⁶

계획은 기관마다 평균 2.6차례 바뀌었고 사업기간은 평균 28.6개월 늦어졌다. 추가로 든 돈은 6,456억 원이다.¹⁷

통근버스를 운영한 기관은 60개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예산은 1,989.9억 원이다. 105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옮겨 실지 않은 곳은 46개다.¹⁸

<표 3> 20년 사업의 결산에는 성과와 한계가 함께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주요 값 (2025년 12월 기준, 일부 항목은 이전 전후 비교)

항목	값	견줄 기준
총 이전비용	9조 1,549억 원	—
청사 신축비	7조 4,762억 원	전체의 81.7%
이전 대상 기관	105개	12개 지역
이전을 마친 인원	47,908명	—
해당 지역 인구	234,684명	목표 267,869명
가족동반 이주율	71%	목표 75%
지역인재 채용률	38.3%(2022년)	목표 30%
퇴사율(97개 기관)	2.66% → 3.11%	이전 전후 비교
통근버스 누적 예산	1,989.9억 원	60개 기관 · 15년

주: 이전 대상 기관 수는 105개이고, 이전을 마친 기관 수는 109개로 적혀 있다. 두 값은 세는 범위가 다르다.¹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2026을 정리.

성과 쪽 값과 한계 쪽 값

성과로 볼 값이 있다. 지역인재 채용률 38.3%는 목표 30%를 넘었다. 열 명 중 네 명꼴이다. 가족동반 이주율 71%는 2022년 67.7%보다 올랐다. 열 명 중 일곱 명꼴이다. 목표 75%에는 못 미쳤다.¹⁹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낸 지방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조 5,072억 원이다. 입주 기업은 4,813곳이다.²⁰

한계로 볼 값도 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다섯 곳뿐이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광주·전남 36.0%, 전북 27.5%다.²⁰

가족동반 이주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 충북은 50.5%, 경북은 51.3%로 전체 71%보다 낮다.¹⁹

수도권 집중을 줄이자는 쪽은 채용과 세수, 입주 기업이 는 값을 든다. 옮기면 안 된다는 쪽은 비용과 지연, 목표에 못 미친 인구를 든다. 같은 결산에 두 값이 함께 실려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 17년

부산은 2026년 3월 세계 금융중심지 지수에서 23위 726점이다. 서울은 8위 741점이다.²¹

부산경실련은 2026년 5월과 6월에 46개 기관을 조사해 7월 13일 결과를 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예치금 7조 720억 원 가운데 부산은행 예치액은 1조 546억 원으로 14.9%였다. 나머지 6조 174억 원은 시중은행 등에 있었다. 부산은행 예치액의 약 5.7배다.²²

이 값을 낸 곳은 시민단체다. 조사 대상 46개 기관 중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13곳이다.²²

같은 구조에서 같은 결과가 되풀이된다. 기관을 옮기는 일과 그 지역에 돈이 도는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이전 성과를 다룬 숫자를 볼 때 그 값을 낸 곳이 어디인지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국회예산정책처(nabo.go.kr) 보고서 원문과 감사원 감사 결과

- 2 사는 지역의 혁신도시 자료를 직접 본다.

확인하는 곳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통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지금 정할 필요는 없다. 이 장은 자료를 갈라 놓는 데까지다.

4장

금융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 사람들은 감독기구를 어떻게 쓰고 있나.

128,419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2025년 ·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21일
발표

42,462건

접수된 분쟁민원 (한 해 전 42,265건)

2025년 ·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21일
발표

46.6일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

2025년 ·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21일
발표

2025년 금융민원은 128,419건이다. 2024년 116,338건보다 12,081건, 10.4% 늘었다.²³

금융상담은 359,063건, 상속인 조회는 310,738건이다.²³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이다. 한 해 전 41.5일보다 5.1일 길어졌다. 이 값에는 자율조정 기간과 사실조회 기간, 서류 보완 기간이 모두 들어 있다.²³

서울 소비자가 멀어진다는
걱정과, 지방 소비자는 이미
멀다는 사실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

지원(支院)

금융감독원이 서울본원 밖에
둔 사무소다. 민원 접수와
상담을 맡는다.

<표 4> 민원이 늘어난 곳은 보험과 금융투자

금융감독원 접수 금융민원의 권역별 건수와 증감 (2024년 대비 2025년)

권역	2024년	2025년	증감	증감률
은행	24,043건	21,596건	-2,447건	-10.2%
중소서민	29,809건	28,942건	-867건	-2.9%
생명보험	13,085건	14,656건	+1,571건	+12.0%
손해보험	40,365건	48,281건	+7,916건	+19.6%
금융투자	9,036건	14,944건	+5,908건	+65.4%

주: 다섯 권역의 건수를 모두 더하면 전체 민원 건수와 같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 2026을 정리

지방 소비자는 이미 멀다

법은 금융감독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몇 곳을 두고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국내지원 안내 화면에 실린다.²⁴

서울 소비자가 멀어진다는 걱정은 지금 서울에 본원이 있다는 조건에서
나온다. 지방 소비자에게는 그 조건이 처음부터 없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과 전화, 서면으로도 받는다. 방법별 비중을 공표한 자료는
없다.

본원을 직접 찾는 사람의 규모는 보도로만 알려져 있다. 서울경제는 금융계
말을 빌려 본원을 찾는 외부인이 한 해 약 7만 5천 명이라고 전했다. 그 가운데
금융 민원과 상담은 약 9천 명이다. 나머지 약 6만 6천 명은 회의와 업무협의,

행사 참여다.²⁵

접수된 민원 128,419건과 본원 방문 약 9천 명은 서로 다른 것을 전 값이다.
나누어 견주지 않는다.

감독분담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분담금을 낸다. 요율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²⁶

분담금 총액은 2024년 3,029억 원, 2025년 3,308억 원이다.²⁷

2025년 3,308억 원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6,400원이다. 이 보고서가
계산한 값이다.²⁸

이 돈은 금융회사가 낸다. 금융회사가 그 비용을 대출금리나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넘기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넘어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전 비용을 추산한 값도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방이전 비용을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금융회사가 더 부담할 몫은 1,000억에서
1,200억 원으로 봤다. 이 값을 낸 곳은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출장비 등 경상비용을 빼고 잡은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밝혔다.²⁹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지금 자료로 답할 수 없다.
이전이 이뤄진 적이 없다.

연구소는 조건 하나만 짚어 둔다. 2025년 검사 계획에서 수시검사 709회
가운데 현장검사가 499회였다.³⁰

검사가 사람이 오가는 일에 걸려 있다면, 거리가 늘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계획에 적혀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사는 곳을 맡는 금융감독원 지원이 어디인지 확인해 둔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금감원소개의 부서·지원 메뉴에 있는
국내지원 안내 화면

2 민원을 낼 때 인터넷과 전화 접수를 먼저 쓴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1332와 인터넷 민원 접수 화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민원을 내려고 서울본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

5장

금융기관에 무엇이 달라지나

검사와 협의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738회

금융감독원이 계획한 한 해 검사 횟수
2025년 계획 · 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9일 발표

499회

수시검사 709회 가운데 현장검사
2025년 계획 · 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9일 발표

3.11%

1차 이전 97개 기관의 이전 후 퇴사율
(이전 전 2.66%)
이전 전후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낸다. 2025년 계획은 검사 738회, 검사연인원 25,155명이다.³⁰

정기검사는 29회이고 수시검사는 709회다. 수시검사 709회 가운데 현장검사가 499회, 서면검사가 210회다.³⁰

수시검사의 70.4%가 현장검사다.³¹

2026년 계획은 707회다. 정기검사 26회, 수시검사 681회다.³²

계획과 실적은 다른 값이다. 2024년 검사 실적은 679회, 26,097명이었다. 계획끼리, 실적끼리만 건준다.³⁰

이직 의향은 설문에서 답한
생각이고, 퇴사율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둘을 같은 값으로 읽지
않는다.

<표 5> 수시검사의 열에 일곱은 현장에서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검사 방식별 횟수와 검사연인원 (2025년 계획)

구분	횟수	검사연인원	비중
정기검사	29회	7,945명	횟수의 3.9%
수시검사	709회	17,210명	횟수의 96.1%
수시 중 현장검사	499회	15,640명	수시검사의 70.4%

구분	횟수	검사연인원	비중
수시 중 서면검사	210회	1,570명	수시검사의 29.6%
합계	738회	25,155명	—

주: 비중은 이 보고서가 계산한 값이다.³²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5를 정리.

이직 의향과 실제 퇴사는 다른 값이다

이미 일어난 일부터 본다. 1차 이전 97개 기관의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올랐다. 한 해 퇴사자 평균은 38명에서 60명으로 1.6배가 됐다.³³

국책은행의 이직 흐름은 이전 논의 이전부터 진행됐다. 산업은행 남성 직원 이직률은 2021년 3%에서 2025년 9%로 올랐다. 기업은행은 1.7%에서 6.2%다. 평균 근속연수도 함께 짧아졌다.³⁴

이 변화의 원인을 이전 논의로 돌릴 근거는 없다. 시기가 다르다.

설문에서 답한 생각은 다른 값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을 했다. 응답은 1,538명이다. 전 직원 약 2,450명 중 열에 여섯이다.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5.6%, 만 40세 미만은 92.5%였다. 열 명 중 여덟 명꼴이다.³⁵

공공운수노조가 사회공공연구원에 맡긴 조사에는 21개 공공기관 재직자 2,632명이 답했다. 이전 반대 74.8%, 퇴사 고려 33.6%였다. 열 명 중 셋꼴이다.³⁶

두 값 모두 이해가 걸린 쪽이 내거나 맡긴 조사다. 이직 의향은 실제 퇴직이 아니다. 1차 이전에서 실제로 오른 퇴사율은 0.45%p였다.³³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감독기구 본부가 그 나라 금융 중심지 밖에 있는 나라는 여럿이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본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두 곳에 사무소를 둔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본부는 취리히가 아니라 베른에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 본부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DC다.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은 네 도시에 사무소를 둔다.³⁷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런던 밖 인력을 늘리고 있다. 2022년 리즈 사무소를 열었고 2025년 1월 그곳 인력이 3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³⁸

일본 금융청 본부는 도쿄에 있다. 다만 신킨은행 등 소형 은행의 일상 감독은 재무국 10곳이 주로 맡는다.³⁹⁾

다만 이들 나라의 감독기구 본부는 대부분 처음부터 수도나 다른 도시에 있었다. 이미 금융 중심지에 있던 감독기구 본부를 통째로 다른 도시로 옮긴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선례가 전혀 없다는 서술도, 흔한 일이라는 서술도 자료와 맞지 않는다.

<표 6> 본부가 금융 중심지 밖에 있는 나라가 여럿이다

주요국 금융감독기구의 사무소 소재지와 그 나라 금융 중심지 (2026년 8월 28일 기준)

나라	감독기구	사무소 소재지	금융 중심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본, 프랑크푸르트암라인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베른	취리히
미국	통회감독청	워싱턴DC 본부, 지구청 4곳	뉴욕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런던, 리즈	런던
일본	금융청	도쿄, 소형 은행 일상 감독은 재무국 10곳	도쿄
호주	건전성감독청	시드니	시드니

주: 이 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적은 것이다. 본부를 옮긴 이력을 적은 표가 아니다.
자료: 각 감독기구 누리집과 미국 연방규정,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① 금융회사 실무자는 서면검사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마다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내는 검사업무 운영계획

② 설문 숫자를 볼 때 조사 주체와 표본, 응답자 수를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보도에 적힌 조사 주체 이름과 응답자 수. 없으면 그 값을 쓰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직 의함 설문값으로 앞으로 몇 명이 그만둘지 생할 필요는 없다. 의향과 결과는 다른 값이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보면 되는지 적는다.

1,989.9억 원

1차 이전기관 통근버스 15년 누적
예산

2010~2025년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60개

통근버스를 운영한 이전기관

2025년 12월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71%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

2025년 12월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국민과 금융회사가 할 일

금융민원과 상담은 인터넷과 전화, 서면으로 받는다. 금융회사는 서면검사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해마다 본다.

법은 이전계획에 비용 추정치를
담도록 정해 두었다. 지금
공개된 추계는 없다.

당국이 결정 전에 공개해야 할 것

첫째는 비용 추정치다.¹¹ 둘째는 인원 접근성 대책이다. 자원 배치와 상담
방법을 어떻게 바꾸는지다. 셋째는 기능별 배치안이다.⁸ 넷째는 통근과 이동에
드는 돈의 추계다.¹⁸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전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지금
공개돼 있지 않다. 2차 이전의 자료가 결정 뒤에 나온다면 1차와 같은 순서가
되풀이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① 민원을 낼 곳을 미리 정해 둔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전화 1332, 인터넷 민원 접수 화면, 사는 지역의 자원

② 이전계획이 나오면 비용 추정치가 함께 실렸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관보와 국토교통부 고시, 법이 담도록 정한 항목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전 논의를 이유로 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이유는 없다.
감독기구의 위치와 금융회사의 영업은 별개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옮기도록 정해진 공공기관이다. 옮길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법이 정해 두었다.

주된 사무소

기관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회사의 본점에 해당한다.

지원(支院)

금융감독원이 서울본원 밖에 둔 사무소다. 민원 접수와 상담을 맡는다.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내는 돈이다. 요율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현장검사는 금융회사 사무실에 나가서 하고, 서면검사는 자료를 받아서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이전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이 심의를 거친다.

관보 고시

정부가 정한 내용을 관보에 실어 알리는 절차다. 실려야 공식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28일에 열어 확인했다.

1.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2026년 4월 29일, [nabo.go.kr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key=2509250001&idx=9244\)](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key=2509250001&idx=9244)
2.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 2026년 4월 21일 배포. 보도자료 원문 전재분. PDF (https://dazabi.com/uploads/pdf_sources/2026/04/article_18103_69e705228ee3b.pdf)
3. 금융감독원,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5년 2월 19일)과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6년 3월 18일). 원문 전재분. kiri.or.kr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310/trend20250310_2.pdf) ·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095>)
4. 금융감독원, 국내지원 안내. 화면. fss.or.kr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46>)

5.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index.go.kr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7)
6.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026년 7월 14일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전재본 (재정경제부). 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283>)
7.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해명자료, 2026년 7월 15일. korea.kr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223>)
8.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지정 발표(2009년 1월 21일)와 찾아오시는 길 안내 화면. 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1326>) · fsc.go.kr
(<https://www.fsc.go.kr/fsc050101>)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문. 맥스캠퍼스 법령DB.
10. 예금자보호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문.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과 위키문헌 법령 전문.
11. Z/Yen Group 中國(深圳)綜合開發研究院,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9」, 2026년 3월. longfinance.net
(https://www.longfinance.net/media/documents/GFCI_39_Report_2026.03.26_v1.1.pdf)
12.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소개 화면. bafin.de
(https://www.bafin.de/EN/DieBaFin/ArbeitenBaFin/arbeitenbafin_node_en.html)
13.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소재지 표기 화면. finma.ch
(<https://www.finma.ch/en/impressum/>)
14. 미국 연방규정 12 CFR 4.4-4.5. ecf.gov (<https://www.ecfr.gov/current/title-12/chapter-I/part-4/subpart-A/>)
15.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 'OSFI at a Glance'. osfi-bsif.gc.ca (<https://www.osfi-bsif.gc.ca/en/about-osfi/reports/publications/osfi-glance>)
16.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사무소 안내 화면과 2025년 1월 16일 리즈 사무소 발표. fca.org.uk
(<https://www.fca.org.uk/news/press-releases/fca-expands-leeds-office-creating-new-jobs-growth-region>)
17. 호주 건전성감독청 안내 화면. apra.gov.au (<https://www.apra.gov.au/contact-us>)
18. 국제통화기금, 'Japa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Technical Note', 2024. imf.org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t/2024/english/1jpfnea2024004.pdf>)
19. 디지털타임스(2026년 8월 25일)·아시아투데이(2026년 8월 25일). 발표 시기에 관한 국토교통부 설명과 장관 발언
20. 뉴스핌(2026년 8월 13일)·파이낸셜뉴스(2026년 8월 24일). 검토 대상 350여 곳
21. 파이낸셜뉴스 뉴스1(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이전 검토 보도
22. 파이낸셜뉴스(2026년 4월 30일)·뉴스1(2026년 5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와 혁신도시 통계
23. 강원일보·아주경제(2026년 1월 19일). 감사원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의 지역인재 채용률
24. 뉴스핌·뉴스1(2026년 7월 13일). 부산경실련 조사 결과
25. 쿠키뉴스·뉴스핌(2026년 8월 11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공공기관 유치 요구. 해럴드경제·부산일보(2026년 8월 3일). 부산광역시가 낸 40곳

26. 뉴스핌(2023년 11월 29일)·시사저널e(2024년 6월 10일)·퍼블릭뉴스(2024년 6월 11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이력
27. 서울경제(2026년 8월 18일). 금융감독원 본원 방문 인원
28. 아주경제(2025년 8월 6일)·뉴스토마토(2026년 8월 25일). 감독분담금 총액과 노동조합의 이전비용 추산
29. 조세금융신문-해럴드경제(2026년 3월 18일). 2026년도 감사업무 운영계획의 감사 횟수
30. 뉴시스(2026년 8월 21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설문
31. 아시아경제·이투데이(2026년 3월 11일·7월 28일). 공공운수노조가 의뢰한 사회공공연구원 설문
32. 이데일리(2026년 5월 10일)·더퍼블릭(2026년 5월 21일). 알리오 자료를 정리한 국책은행 이적률

각주

1.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망」. 정책브리핑 전채본(재정경제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항목이 있다. 발표일과 하반기 미연·2027년 착수는 아주경제-전북일보 2026년 7월 14일 보도로 확인했다.
2. 국토교통부 2026년 7월 15일 해명자료.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채본으로 확인했다.
3. 국가데이터체 e-나라지표. 2025년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1.0%인 26,347천 명으로 적혀 있다.
4. 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24일 보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이 언급했다고 적었다. 정부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5. 파이낸셜뉴스와 뉴스1의 2026년 8월 13일 보도. 두 매체가 같은 단독 기사를 실었으므로 한 곳에서만 확인한 것이다.
6. 디지털타임스-아시아투데이 2026년 8월 25일 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7.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제4항·제5항과 혁신도시법 제4조 제5조. 혁신도시법 제4조 제4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조정을 거치도록 정한다.
8. 금융위설치법 제25조,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다섯 조문 모두 제1항이 소재지를 정하고 제2항이 지원·지사·지점·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정한다.
9. 금융위원회 찾아오시는 길 화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다.
10. 21대 이력은 뉴스핌 2023년 11월 29일, 22대 재발의는 시사저널e 2024년 6월 10일과 퍼블릭뉴스 6월 11일 보도로 확인했다. 의안번호와 처리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11. 행복도시법 제16조 제3항의 다섯 호다.
12. 금융위원회 2009년 1월 21일 발표. 여의도는 종합 금융중심지, 문현동은 특화 금융단지로 지정했다.
13. 국회의원의 요구는 쿠팡뉴스-뉴스핌 2026년 8월 11일 보도, 부산광역시 2월에 낸 40곳은 해럴드경제 부산일보 2026년 8월 3일 보도다.
14. 감사원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전한 강원일보-아주경제 2026년 1월 19일 보도. 17.7%는 두 매체에서, 국토교통부 발표치 40.67%는 강원일보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감사보고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5.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2026년 4월 29일). 기관이전비는 7,758억 원 8.4%다. 1인당 같은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9조 1,549억 원 ÷ 47,908명 = 약 1억 9,100만 원이다.
16. 같은 보고서. 대상 기관은 105개,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109개로 적혀 있고 세는 범위가 다르다. 234,684명은 2025년 12월 주민등록인구다.
17. 같은 보고서. 추가로 든 6,456억 원은 기관당 평균 61.5억 원이다.
18. 같은 보고서. 기관장이 이주하지 않은 기관은 105개 중 53개이고 공석 7개를 빼면 46개다.
19. 같은 보고서 표. 목표는 75%이고 2018년 6월 62%, 2022년 67.7%, 2025년 12월 71%다. 지역별로 부산 86%, 제주 83.2%, 경북 51.3%, 충북 50.5%다.

20. 지방세와 입주 기업, 인구가 는 다섯 곳은 같은 보고서 같다.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2026년 1분기 값을 전한 뉴스1 2026년 5월 17일 보도다.
21.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9』 (2026년 3월) 원문.
22. 투산경실편이 2026년 5월과 6월에 46개 기관을 조사해 7월 13일 낸 것이다. 조사 대상 전체 예치금은 80조 27억 원이다. 배수는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23.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반환 및 금융상당 등 동향」 (2026년 4월 21일). 46.6일에는 자율조정·사실조사·서류 보완 기간이 모두 들어 있다고 원문이 밝혔다.
24. 금융위성치법 제25조 제2항. 지원의 수와 이름은 확인하지 못해 실지 않았다. 지원별 인력과 처리 건수를 담은 공개 통계도 없다.
25. 서울경제 2026년 8월 18일 보도. 기사가 밝힌 출처는 금융계이고 기관이 공표한 통계가 아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접수·상당의 방법별 비중을 담은 기관 통계도 공개된 것이 없다.
26. 금융위성치법 제47조, 제1항이 검사를 받는 기관에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고, 제3항이 분담요율과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장하도록 한다.
27. 2025년 3,308억 원은 아주경제 2025년 8월 6일과 뉴스토마토 2026년 8월 25일 두 곳에서 확인했다. 2024년 3,029억 원은 아주경제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예산서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28.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3,308억 원 ÷ 51,682천 명 = 약 6,400원이다. 총인구는 국가데이터저 e-나라지표와 2025년 값이다.
29. 뉴스토마토 2026년 8월 25일 보도. 약 3,000억 원이라는 노동조합의 추산이고 정부나 기관이 공표한 값이 아니다.
30. 금융감독원 「2025년도 감사업무 운영계획」 (2025년 2월 19일). 감사 방식별 횟수와 감사인원원은 <표 5>와 같다. 2024년 실적은 679회 26,097명이다.
31.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499 \div 709 = 70.4\%$, $29 \div 738 = 3.9\%$ 다.
32. 금융감독원 「2026년도 감사업무 운영계획」 (2026년 3월 18일). 전제본에 감사 횟수와 감사인원을 각각 8.3%, 4.1% 늘린다고 적혀 있다. 707회·정기 26회·수시 681회는 조세금융신문과 헤럴드경제 같은 날 보도로 확인했다. 증기율은 2025년 실적과 견준 값이다.
33. 같은 보고서 표. 97개 기관 기준이고 개별 기관 회사들은 원문에 없다. 정원 평균은 1,428명에서 1,917명으로 늘었다.
34. 발리오 자료를 정리한 이태일리 2026년 5월 10일과 디파블릭 5월 21일 보도. 수출입은행은 3.2%에서 4.1%로 올랐다.
35. 뉴스스 2026년 8월 21일 보도. 5점 척도 3점 이상 85.6%, 4점 이상 69.7%, 회계사 90.6%, 변호사 94.2%다.
36. 아시아경제 2026년 3월 11일과 이투데이 7월 28일 보도. 공공운수노조 의뢰로 2026년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했다. 20대는 반대 85.3%, 회사 고려 48.9%다.
37.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본과 프랑크푸르트임마만에 사무소를 둔다고 밝혔다. 미국 통화감독청 지구청은 뉴욕·시카고·댈러스·앰버 네 곳이다.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은 직원 약 1,300명이라고 밝혔다.
38.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2025년 1월 16일 발표. 2025년에 100명을 더 뽑는다고도 밝혔다.
39. 국제통화기금 자료(2024). 신진은행 등 소형 은행의 일상 감독은 주로 재무국 10곳이 위임받아 한다고 적었다.



제목	감독기구 이전, 정해진 것은 절차뿐이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65· NEXUS Research 2026_65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30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감독기구 이전, 정해진 것은 절차뿐이다」, 넥서스 리서치 2026_65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 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특정 정책이나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도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